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권혜린, 사무관 정재상
(044-200-2068, 2533)

이낙연 총리, 내각이 새 각오와 긴장감 갖고 국정운영에 임할 것 당부

-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차분하고 내실있는 준비 주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라돈침대 수거, '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등 철저한 정책현안 대응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 경제부총리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함
-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및 경제·사회 분야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6.1) 결과 △남북 산림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 △북미정상회담 추진동향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추진 가속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경 및 본예산 집행(2개월내 추경 70% 이상 집행 등) 등을 점검(서면)했습니다.
 - 사회 분야에서는 △라돈침대 수거 등 대응계획 △'22년 대입 개편안 공론화 동향 △최저임금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질 정책 환경에서 2년차 국정운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이,
 - 내각기강 재확립, 남북협력 준비 본격화, 현안정책 신속 대응, 하반기 정책 준비, 대 국민·국회 소통 강화 등 새로운 추동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보고된 분야별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이낙연 총리는

- ① 우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분하고 촘촘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줄 것과 특히 이중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② 경제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속도 가속화를 주문하는 가운데 특히 1분위 저소득층 중 고용 밖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③ 사회분야에서는 라돈침대의 신속한 수거를 우정본부가 나서준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고 하면서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아울러 '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진행관리를 강조하며 오는 8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제7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6월 19일(화, 잠정) 개최 예정입니다.